



EU경제사회평의회, 독금법수정 신중요망

독금법적용면제조항 폐지 법 공백 초래

EU의 경제사회평의회는 최근 정기선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 규정한 4056/86의 수정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폐지는 법의 공백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행기간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4056/86의 대체가 될 위원회 규칙을 기초로 하여 계속적인 동맹에 대한 포괄적용제외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EU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인 경제사회평의회는 포괄적 적용제외의 폐지에 대하여 신중론이 나오면서 이후 EC의 검토작업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는 2004년 10월에 제출한 백서를 통해 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운임수준 안정 유지 등이 있다는 결정적이고도 경제적

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적 적용제외 폐지를 제안했다.

새로운 선사간 공통된 대체수단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왔으며, 그 대체제안을 기초로 2004년 12월 15일까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최종안을 낼 예정이었다. EU 경제사회평의회는 의견서에서 현 시점에서 동맹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구주선사들이 비구주, 주로 아시아 선사들과 격렬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면서 큰 손실을 입게 만들 것이며, 개발도상국 항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주의 중소선사들 입장에서는 대형선사들의 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EC는 해운업의 특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맹제도 폐지에 따른 EU가맹국들과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아시아역내 정기항로 운임회복 가시화

지난해 왕성한 수요와 선사간 협력으로

아시아역내의 컨테이너항로는 지난 2004년 왕성한 수송수요와 선복수급 조절을 위한 선사간들간의 '합동 연횡'으로 운임회복이 가시화되는 등 운임회복 원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해운시장을 견인한 중국 발착의 간선편 확충을 중심으로, 중동, 동남아시아연합(ASEAN), 인도 관련의 피더노선도 증가한데다 일부 선사들이 선복을 감축함으로써 선복부족 현

상이 나타나 운임이 크게 회복됐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역내 취항선사들은 선복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운항을 확대함은 물론 스페이는 교환과 제휴확대 등 '합동연횡'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아시아역내 항로의 주된 공동배선을 보면, 편성은 다채롭고, 참가선사의 수는 3사 형태가 많았다.

동아시아 12개국/지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주요